수능 '물리Ⅱ 복수정답 인정' 사상 초유 입시 대란

상위권 학생 진학지도 대혼란

모집 끝난 서울대 등 재접수 불가피
전남대 일부 학과 수시 재사정 해야

수능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이미 발표된 성적에 대한 재채점·배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교사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시험 직후 이뤄진 이의신청 기간에 물리Ⅱ 11번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묵살한 바 있어 더 논란을 키웠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혼란스러운 교실=과학탐구영역에 포함된 8과목 중 하나인 물리Ⅱ의 경우 대개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르는 과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상위권 학생일수록 1~2점 차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Ⅱ를 고른 학생 뿐 아니라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까지도 간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혼란은 더 커진다.

광주 대성여고 김창현 진학실장은 "물리Ⅱ를 치렀던 학생 뿐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은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 들어맞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뒤늦게 복수정답을 허용하면서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들에게는 다행일 수 있지만 물리Ⅱ의 등급이 높게 배치돼 과학탐구영역의 다른 과목을 고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미 합격자까지 발표한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낙방한 학생들은 물리Ⅱ를 선택했을 경우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조선대 등 대부분 지방대학은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으로 언어·수리·외국어영역 등만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크게 관련이 없다.

입시학원 플라톤아카데미 서정현 원장은 "물리Ⅱ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적어서 아직 피부에 와닿는 반응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대입 전형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분명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원 측이 시기를 너무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 키운 교육당국=한국물리학회가 물리Ⅱ 11번 문제의 복수정답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평가원은 "이상 없다"며 오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수능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도 이미 같은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랐으나 묵살한 바 있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교육부 역시 평가원의 입장 만을 지지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처럼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 입장을 번복한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비난 여론을 감당키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리학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물리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마당에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내용에 따른다는 수능 출제 원칙에 비춰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원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평가원은 특히 물리학회의 지적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회피한 채 오로지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수험생들의 반발과 분노를 부추겼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능 오답 논란을 빚고 있는 2008학년도 수능 물리 문제와 관련해 24일 오후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복수정답' 인정을 골자로 한 공식입장을 밝힌 후 허리를 굽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고 2007 ❷ 광주·전남 다시 야권으로

대선 압도적 지지 불구 참패 10년만에 '정치적 고립' 재연

17대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범여권의 선두주자였던 정동영 후보에게 80%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이는 15·16대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 후보에게 던진 90% 이상의 '몰표'에는 못미치지만 압도적인 지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기에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의 3기 집권시대를 열어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실정·범여 분열 패배 불러
총선 대오각성 의회 권력 확보 관심

그러나 정 후보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6.0%(대구)~32.7%(제주)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해 참패하고 말았다. 광주 79.8%, 전남 78.7%, 전북 81.6% 등 호남에선 80% 안팎을 얻었지만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30%도 넘어서지 못했다. 대전·충남에선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도 밀려 3위로 쳐졌다. 영남지역 득표율은 10.3%로 한 자릿수를 간신히 넘겼고 충청권에선 22.6%를 얻었다. 지역적 외연 확대에 실패한 탓이다.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35% 이상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정권탈환에 성공했고, 정권은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옮겨가게 됐다.

특히 대선 표심만 놓고 보면 '범여권의 메카'였던 호남은 '정치적 섬'으로 남게 됐다. 우려해온 '호남 고립' 구도가 재연된 것이다.

대선 패배에는 무엇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지만, 범여권의 분열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만 부채질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촉발된 범여권의 분열과 갈등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광주·전남 재야·시민사회단체는 당사 점거 농성까지 불사하며 민주개혁세력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지역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의석 141석의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두 달 전까지도 정동영계, 김근태계, 손학규계, 친노계, 민주당계, 시민사회계 등 여러 계파로 나뉘어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신당과 민주당은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와 합당 등 '대통합' 협상에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지분싸움에만 골몰했다.

막판까지 성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도 선거 전 날 최종 무산됐다. 양측 모두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하면서도 서로 일방적 양보와 사퇴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선 참패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범여권 각 정당은 정치적 진로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지만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마저 보수진영에 넘겨줄 공산이 높다. 이 경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단일대오 형성과 공천 혁명을 통해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당 관계자는 "지금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에 나서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에서도 대패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형 일정 차질 없게 대학에 협조 요청" 서남수 교육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 등급 조정 학생에 한해 28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도록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저녁 정부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물리Ⅱ 과목에 대한 재채점을 실시해 등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교육부는 새로 통보된 성적 등급이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 학생은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아울러 대학의 합격 여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물리Ⅱ 과목이 등급이 조정된 학생에 한해 28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도록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차관은 또 "추후 수시 2학기 합격이 결정되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취소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조정된 전형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은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성적표는 가능한 한 모레 오전까지는 수험생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원이 추진 중"이라며 "내일 중에라도 성적 통지가 가능한 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비상지원팀을 구성해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대입지원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등급 상향 조정되는 학생들만 성적표 보낼 것"

이명준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연구관리처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준 수능연구관리처장은 24일 "수능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등급이 바뀌는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조속히 다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정강정 평가원장을 대신해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수 정답을 인정할 경우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대입 수시전형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등급을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성적표를 재발부하겠다.

―등급이 하향조정돼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닌가.

▲이미 수시전형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다. 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해 추가 합격하는 학생은 극소수일 것으로 보여 이미 합격한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에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등급이 바뀌는 학생들이 몇명 정도인가.

▲1천여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중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되는 학생은 5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9등급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 등급이 일부 뒤바뀌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9등급 표준비율이 무너지진 않는다. /연합뉴스